

배포일시	2022.11.16.(수)
보도일시	즉시

##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공동주최,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개최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

- 더불어민주당의 썩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본부장 박찬대 의원)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즉시 이행할 것과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좌장으로 하는 “세월호참사 교훈을 통해 본 이태원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이태원참사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국정조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노웅래 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외교참사, 경제참사, 인사참사에 이어 이태원참사까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 보다 참사를 축소하고 숨기기 바쁘다”고 설명한다. 이에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과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번 공동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재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

- **박찬대 본부장**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가 재해위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이태원참사는 명확한 인재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했다”고 진단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태원참사의 원인과 쟁점, 국가책임 문제, 그리고 향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태원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인다.
-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 본 이태원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발제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과적, 과승, 평형수 부족 등의 기술적 원인과 업계와 관의 유착관계 등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재난방지와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며 재난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상 국가책임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한다. “이태원 참사 역시 불법증축으로 인한 보행공간 미확보 및 대통령, 행안부장관, 용산구청장, 소방서장의 보고체계 혼선 및 늑장대응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반복되는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한다.
-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방송통신대 윤대범 교수**는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방식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이태원참사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재난관련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이태원참사를 책임질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장관에게 최고 권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것이다”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장관의 무능을 입증한 것으로 각자도생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고 덧붙인다.
- 두 번째 토론자인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불법증

축으로 인한 공간적 협소함과 MZ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안전관리보다 마약단속이라는 대통령의 부정적 시그널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문재인정부 때 구축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누장보고와 혼선이 발생했는데, 이는 재난안전에 대한 훈련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재난 관련 통합시스템 구축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태원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국민에 대한 치료와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별첨 : 토론회 프로그램

##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기획안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306호(정책위원회 회의실)

### □ 주요 내용

-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쟁점
- 국가재난관리체계 작동원리 및 국가책임
-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

### □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인사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0:30~10:35
	•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 박찬대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10:35~10:45
	내빈소개 및 기념촬영	10:45~10:50
좌장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	
발 제	•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세월호참사 교훈을 통해 본 이태원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10:50~11:10
토 론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11:10~11:40
	종합토론 및 정리	11:40~11:50